



보건의료노조
파업
16, 15면

미국,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 계획
3면

IAEA 발표에도 여전한
핵 오염수 반대 정서
4면

정의당의 위기
5면

프랑스 소요
10~13면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경제 위기 심화와
운동의 전망 7~9면

노동자 파업은 계속돼야 한다

관련 기사 16, 15면

새마을금고 부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금융 불안정을 높이던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새마을금고에 6조 2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공급해 위기를 진정시켰다. 새마을금고가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했던 채권들을 급히 내다 팔면서 시중금리가 인상(채권 가격 하락)돼 금융권 전반에 위기가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뱅크런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의 만기가 하반기에 대거 돌아오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시중 은행 등에게 예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5퍼센트가 넘는 금리로 1년 만기 예금을 20조 원이나 유치했다. 만기가 끝난 뒤 예금이 대거 이탈하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문제가 다시 터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거 참여한 제2금융권의 불안도 여전하다. 특히,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발 위기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4월까지 새마을금고의 예금이 7조 원 줄어드는 동안 저축은행의 예금도 6조 원 넘게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건설업계도 뒤흔들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히자, GS건설이 PF 관련 부채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GS건설이 주택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부채 2조 9018억 원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조 2893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이 최소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GS건설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이다.

삼성증권의 조사를 보면, 국내 주요 건설사 7곳(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의 PF 지급보증 규모는 총 14조 4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롯데건설(5조 7000억 원),



시중 은행을 동원한 정부의 개입으로 새마을금고 위기가 잦아들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태영건설(3조 16억 원), 현대건설(1조 5800억 원)도 PF 연관 부채가 특히 많았다. 이 대기업 집단들이 부동산 시장 악화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커지는 모순

금융 불안정이 점점 커지자, 한국은행의 모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 거품 붕괴를 막으려면 금리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퍼센트로 또다시 동결했다. 최근의 금융 불안정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를 더 우려한 듯하다.

그러나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되다 보니, 한국은행이 억제하려고 한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9월 GDP 대비 105.7퍼센트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올 3월까지 103.4퍼센트로 낮아졌지만, 4월부터 석 달 연속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비율도 다시 상승할 위험이 커진 것이다. 특히, 올 6월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이나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윤석열 정부의 고통 전가에 맞선 대중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대출을 늘리고 있다. 역전세난 방지를 위해 집주인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풀었고, 특례보증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것이다.

게다가 지난 6월 중국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2.4퍼센트나 감소하며 실물경제가 침체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중국의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중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시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 개악 등을 추진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 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대폭 올리는 등 서민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데에도 열심이다. 경기 침체와 부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공격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증폭시키는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강동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집속탄 지원으로 패박 된
우크라이나 전쟁 성격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확실히 정리됐다. 이제 어리석거나 부정직한 자만이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 테다.

집속탄은 방어 무기가 아니다. 되도록 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다. 집속탄이 남긴 불발한 자탄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오래도록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의 목숨과 사지를 앗아갈 것이다.

집속탄 지원 결정은 영국 국가를 평소 믿음직스럽게 변호해 온 BBC 안보 담당 기자 프랭크 가드너마저 충격에 빠뜨렸다. “집속탄은 끔찍하고 무차별적인 무기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집속탄을 금지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단지 집속탄이 끔찍하다는 것이 아니다. 집속탄이 공격 무기라는 것이다. 가드너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1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에 깊숙이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 러시아의 침공 군대를 몰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포탄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집속탄 재고를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술한 방어 진지에 배치된 러시아 보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되찾게 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크림반도까지 되찾게 하려 할 수도 있다. 이 공세가 성공적일수록, 프리고진의 실패한 쿠데타로 약화된 푸틴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에 손을 댈 위험도 커진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무기는 무엇이든 지원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핵전쟁은 지구상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

물론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이 푸틴에게 핵무기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줄곧 밝혀왔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데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걱정을 일부 덜어 주는 일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만 그럴 뿐이다. 핵무기 보유국의 통치자가 정치적·개인적 생존이 위태로워질 때 어떤 일을 감행할지 짐작케 해 주



집속탄은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다. 한미 연합 훈련에서 사용된 집속탄

는 역사적 선례 따위는 없다.

물론 바이든이 젤렌스키의 모든 요구를 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혐오를 보이는 중·동부 유럽 정부들은 이번 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은 그러한 압박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와 독일 정부는 푸틴이 제거된 후에도 러시아와의 적대가 계속될까 봐 우려한다. 러시아 권력층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와 접한 긴 국경선까지 나토가 밀고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북대서양 조약 5조(집단 안보 조항)에 따라 나토는 향후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시 직접 관여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나토 정상회의

그래서 미국과 영국·독일·프랑스(터키를 제외하고 나토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들이다)는 나토 가입에는 못 미치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몇몇 정부 관료들은 그 방안을 ‘이스라엘 모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공공연한 군사적 지원과 비슷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따라 십 년에 한 번 씩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에도 비슷한 것을 약속해 우크라이나 군대를 적절히 뒷받침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젤렌스키 자신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특색이 있는 ‘거대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모든 관공서와 대형 마트, 영화관 같은 곳에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방위군의 파견자들이 배치되고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안보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틀림없이 젤렌스키는 둘 다를 원할 것이다. 나토에도 가입하고,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대규모 군사적 지원도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독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젤렌스키는 별 수 없는 처지다. 바이든은 전쟁을 키우지 않으면서 푸틴을 계속 압박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 이 국가들은 요란스럽게 호전성을 보이지만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힘은 미미하다(발트해 연안국들의 국민소득이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퍼센트도 안 된다). 어찌됐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현재의 균형을 확전으로 더 기울게 만들었다.

출처 Alex Callinicos, 'US cluster bombs to Ukraine fuels wider war' (2023. 7. 11) / 번역 이원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일장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케이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9 772005 821003 29

IAEA의 방류 합리화에도 한·일 모두에서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다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입국 과정에서 마주친 성난 시위대를 피하느라 공항 화물 주차장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민주당은 7월 1일 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진보당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한 집회로 합류했다. 공동행동은 7월 15일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시청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IAEA를 규탄하며 47번째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여수, 대전에서도 같은 날 집회가 열렸고, 12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2차 제주범도민대회가 열렸다.

현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은 민주당·좌파·환경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백~수천 명이 거의 매주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각 단체들이 받고 있는 서명을 합치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일부 좌파 단체들이 괴담을 유포하며 국익을 해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신경질을 부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핵 오염수 방류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태계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성이 불확실한데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기시다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커다란 반감을 드러낸다.

핵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은 반대가 늘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여당이 운동을 비난하는 한편 애써 일일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여당 의원들이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물을 퍼먹는 한심한 쇼를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7월 8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일본 노동자들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은 이런 광범한 반대 여론을 대변하고 정부가 은근슬쩍 방류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구실을 해 왔다. 양심적 과학자들이 방류를 정당화하는 엉터리 '과학'을 비판하고 진실을 알리려 해 온 것도 그 운동의 일부였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뒤 윤석열의 국정지지도는 6퍼센트나 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운동이 어떻게 일본 기시다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 한국 운동이 일본 정부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운동이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편을 들면서도 대중의 눈치를 살피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사실상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IAEA 보고서 존중)을 취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추가 조처를 요구했다.

핵 오염수 한일동맹

그러나 기시다는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다.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했고, 나름 압력도 가한 듯하다. 미국에 이어 거리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일본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의 바람과 달리 방류를 앞두고 일본 국내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 공영방송 NHK 여론조사 결과 방류 찬성 의견은 35퍼센트밖에 안 났다. 반대 20퍼센트보다는 많았지만,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이 4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일본 어민들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한일 노동자 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오바타 마사코 일본 전노련 의장과 노기 시게오 일본 후쿠시마현노련 의장, 와타나베 히로시 일본 전국노조연락협의회 의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IAEA를 비판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시키고, 더 폭넓게 연대해 반대 여론을 강화하자"고 호소했다.

기시다가 윤석열을 만나고 있던 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니시무라는 후쿠시마 어업인들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득에 재차 나섰지만 퇴짜를 맞았다.

지금대로라면 "올해 여름 내에" 방류하겠다는 기시다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정서와 운동이 성장하면 한·일 양국 정부에 커다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장호중



6월 20일 후쿠시마 현청 앞 집회 "악속을 지켜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

정의당의 위기,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김문성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반(半) 좌향 좌’하는 (신당 방식의) 혁신 재창당을 결정했지만, 당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총선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7월 7일 정의당 내 의견그룹 ‘새로운 진보’ 소속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탈당했다.

그들은 정의당의 실패한 노선과 자신의 노선을 대비시켰다.

“구 진보 세력 연합 vs 시민 참여 정당” “고립되고 배타적인 독자 노선 vs 더 넓은 진보 집권 노선” “반민주-비국힘 노선 vs 반국힘-비민주 노선”

탈당의 변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의 임무는 4년 후 진보 집권과 좋은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들이 노동 중심성을 말하는 노선과는 오히려 더 거리를 두는 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드러낸다. 사실상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그 그룹 핵심 구성원들의 뿌리가 유시민·천호선 등이 이끌던 친노 무연계인 옛 국민참여당에 있음을 반영한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들이 표방한 ‘유능하고 유연한 진보’란, 국회 내 입법 협상과 선거 당선, 타협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이다. 물론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통해 집권당의 하나가 돼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정의당 창당시 심상정·노회찬·유시민·천호선·이정미 등 핵심 지도자들 간에 합의된 것이었고, 이후에도 줄곧 공식 노선이였다.

그런데 최근 몇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득표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내년 총선 전망도 비관적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정의당은 소폭 좌선회를 결정하고 이를 혁신 재창당의 방향으로 잡았다. 노동조합 지도층을 재창당의 핵심 포섭 대상으로 삼고, (현재의 위기 수준에는 부족하지만) 기존보다 조금 좌파적인 강령을 내걸고, 민주노총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열어 놓았다.

아마도 ‘새로운 진보’ 측은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대를 꺾고려게 여기고 특히 진보당 등 자민통 경향과의 연대 가능성을 경계한 듯하다.



최근 정의당 지도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에 당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가 이끄는 ‘세번째 권력’ 그룹이 등장했다. 한때 ‘심상정 키드’로 불렸던 류호정·장혜영 의원은 지금은 정의당을 해체하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만드는 중도 신당에 합류해야 한다는 편에서 있다.

최근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라는 명목으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심력

‘새로운 진보’ 측은 이런 일들을 정의당 창당 노선(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지향)을 깨는 걸로 본 듯하다.

‘새로운 진보’ 측이 노무현 정신과 함께 노회찬 정신의 진정한 계승을 말하면서 현 당내 실세인 심상정 의원에게 특별히 배신감을 토로한 이유일 것이다.

“분명한 좌표가 없는 중도 노선으로, 정치적 냉소를 부추겨 오로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세력이 ... 진보정당의 역사를 함부로 무시하고 해체하겠다고 [해도] ... 심상정 의원을 비롯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세번째 권력 같은 이들을 키우고 방조했고 ... 신당 창당에는 결국 이들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진보’든 ‘세번째 권력’이든 분열을 실행(또는 위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혁신 재창당 결정에 포함된 소폭의 좌선회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 측이 현 지도부와 ‘세번째 권력’을 한통속으로 싸잡아 비판한 것은 부정확하거나 부정직한 것이다.

‘세번째 권력’의 청년 정치인들은 최근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과 공개적으로 갈등했다. 이정미 지도부는 반윤석열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세번째 권력’은 탈당을 위협하며 정의당의 소폭 좌선회 결정에 저항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우경적인 노선을 밟자고 주장한다.

사실 정의당의 노선 미세 조정이 90도 좌선회도 아닐뿐더러,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노선을 명확히 폐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런 반발이 탈당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너무 어두워서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최근 정당 지지도에서도 정의당 지지도는 5퍼센트 수준을 넘지 못하고 반등의 기미도 없다.

그래서 최근 정의당 지도부는 기존과 달리 정치투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투쟁에서 이정미 대표가 보름 넘게 단식하며, 거리 집회로 당원을 동원하려고 한다. 당원의 수동화가 워낙 만연해 쉽지 않지만 말이다.

이정미 대표는 7월 13일 심지어 민주노총 보건노조 파업 결의대회에도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단기간에 존재감 부진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 노선 조정이 구심점 강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노선의 산물들인 신진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며 원심력이 커진 것이다. 반발의 동기는 정의당 간판을 달고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다.

좌파 전반의 부진

그런데 존재감 부진은 단지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노총 집행부의 진보 대연합당 건설 제안도 각자도생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는 체제의 복합 위기를 배경으로 한 정치 양극화에서 좌파가 왼쪽 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화되고, 분열 행태까지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래서 개혁 염원 대중에게 가시적 대안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강경 우익화 기조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이에 맞서 대역 강경 기조를 표방하면서 공식 정치에서 오히려 양당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좌파 정치 세력들의 존재감 없음이 더 강화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성공으로 좌파가 성장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해 개혁을 성취한다는 포퓰리즘 전략 때문에 개혁주의 좌파들은 수년간 소심하고 온건하게 행동했다.

특히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기는커녕 그런 불만이 정부 자체에 대한 전면적 항의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투쟁이 파편화됐다.

게다가 미·중 제국주의 갈등 심화가 야기한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침체에서 비롯한 많은 첨예한 쟁점들에서 개혁주의 좌파는 위기의 깊이에 걸맞은 급진적 대안을 구축하길 회피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대중의 정치 의식이 좌경화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것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좌파 전반이 부진했던 직접적 원인이다.

개혁주의 좌파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로도 안일한 실천을 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이 그 한 사례다. 그중 일부가 금태섭 중도신당에 접근하고 있다. 그에 반발한 일부는 더 분명한 야권연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좌파에게 불리해진 정치 상황이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개혁주의 노선이 이 상황을 자초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강경 우익화 행보에 맞선 전 계급적인 노동자투쟁이 일어나야 변화의 계기가 생길 수 있다. 선거주의적 조급함이 아니라 참을성을 갖고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서평 |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임승수)

자본주의 비판은 좋아도 그 대안은 부적절하다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임승수 작가의 에세이집이 나왔다. 저자는 30년째 사회주의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소탈하고 재치 있게 써내려 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빨갱이가 뭐냐’는 초3 딸아이의 질문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사회주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썼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사건과 얽히고, 강연 중에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직원을 착취하고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받고 뭐라 현명하게 답할지 고민한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때로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저자는 사회주의자로 사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저자는 자기 삶이 ‘카르페 디엠’[오늘을 즐겨라]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미 같다.

저자가 와인을 즐길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책을 쓰는 것도 그런 일일 테다. 최근 저자는 와인 주제로 초대 받은 강연에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책을 판매용으로 들고 간 일을 페이스북에 소개하기도 했다.

오해와 편견

저자가 이 책에서 단지 사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다. 자본주의가 왜 문제인지 드러내고, 사회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와 편견을 반박하며, 사회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함을 주장한다.

이 책은 띠지 문안처럼 임승수 작가가 말하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고도 할 수 있다.

에세이집이라 대중적으로 쓰였음에도, 《자본론》 해설서 저작으로 인기 있는 작가답게 자본주의 비판이 신랄하고 깊이도 꽤 있다.

저자는 극심한 빈부격차, 만연한 실업,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이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은폐된 “착취”와 “생산 활동 일체가 이윤 극대화라는 지상 목표에 종속”됐기 때문이다.

“이윤은 ... 타인의 노동이 축적된 결과물”인데 “그것이 사적 소유권이라는



“자본주의는 대다수 노동자를 소수 자본가의 지배하에 두는 경제적 독재 시스템”

현대판 신분제를 통해 자본가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됐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자가 내세우는 것과 달리 자본주의에 진정한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는 비판도 신랄하다.

“초등학교 반장도 투표로 뽑는 세상이지만 사장을 노동자의 투표로 뽑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가.”

“자본주의란 결국 대다수 노동자를 소수 자본가의 지배하에 두는 경제적 독재 시스템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화폐 크기만큼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 구성원 공동의 소유로 전환”하는 사회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분단 구조로 인해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의미가 악마화”돼 있다.

저자는 이 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민 건강보험,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 급식, 공공 임대 주택 등도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사회주의가 악마가 아님을 말한다. 또, 20년 전 한 탈북 여성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도 장점과 단점 둘 다 있는 사회라고 평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종전 선언조차도 “반국가 세력”의 행위로 규정할 만큼 공식정치가 우경화하는 상황에서, 사

회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사회주의가 옳고 필요하다는 저자의 외침은 더 의미가 있다.

세계를 조금만 둘러봐도 오늘날 사회주의가 정말이지 절실하다.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죽음을 낳는 체제다.

요 일주일간의 소식만 봐도 그렇다. 아프리카 난민선이 실종돼 또다시 수백 명이 죽었다. 미국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본 지배자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고,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야만을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대안 삼아 보자고 주장하는 책이 많이 팔린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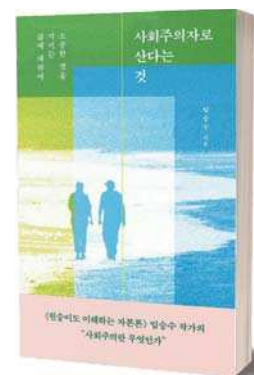
저자가 자기 경험에 비춰서 사회주의가 대중에게 더 많이 공감받고 있다고 말한 점도 인상적이다.

물론 저자가 얘기하고, 대중이 공감하는 ‘사회주의’의 내용은 대체로 개혁주의적 사회주의와 복지 정책들이겠지만 말이다.

자본주의 국가

임승수 저자는 ‘자본주의=사적 소유, 사회주의=국가 소유’로 본다. 이 관점에 따라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로 보고,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나라들의 좌파 정부를 대안으로 여긴다.

사실 북한 사회를 시장자본주의보다 근본에서 더 열등한 사회로 보는 관점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

임승수 지음, 수오서재, 252쪽, 16,800원

은 시장 자본주의 외엔 대안이 없다는 반동적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북한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저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낫다.

하지만 북한을 사회주의로 볼 순 없다.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소련의 군대에 의해 건설됐고, 노동계급은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관료에게 착취받고 억압받는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개혁도 지지할 만한 것이었지만, 차베스의 정당과 후계자들이 통치하는 오늘날 베네수엘라가 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그 대가를 보통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 동학은 ‘이윤을 위한 축적과 경쟁’이고,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외적 존재가 아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과 경제도 자본주의적이다. 국가를 통한 개혁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는 이유다. 유럽에서도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들이 집권 후에 실망감만 자아낸 까닭이기도 하다.

반면, 사회주의를 곧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으로 보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전통도 국제적으로 존재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를 변화하려는 삶에 대해 고민을 던져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성지현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운동도 그래야 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급증했고(더구나 청년층에서 정부 지지가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대중의 반감은 생계 악화라는 경제적 곤경이 주요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제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파산 일보직전 사태에서 봤듯이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은 실질적이다. 실리콘밸리뱅크와 크레디스위스 은행 사태 수습에서 봤듯이 지난 몇 달 동안은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커져서 돌아올 수 있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도, 이윤 감소도 극도로 기피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금융 긴축을 시행해 왔다. 이는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경기후퇴를 촉진할 공산이 크다.

금융 위기는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번지고 실물 경제로 번지며, 이는 금융 위기를 더 악화시키며 실물 경제의 위기와 맞물려 악순환을 빚는다.

한국의 5대 은행이 떠안고 있는 시한폭탄인 잠재적 부실 대출금 37조 원이 가을에 터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걱정이 태산 같다.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곧 제2금융권의 위기가 진행 중인데, 5대 은행이 비상 체계를 가동한 것을 보면 금융 위기는 제2금융권을 넘어 닥칠 수도 있는 듯하다.

특히, 생계비 압박을 받아 온 수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가게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평균적인 가게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2배가 넘어 OECD 6위나 된다. 전세 대출을 포함하면 OECD 1위라고 한다.

1930년대 대불황이든 2010년대 이후 경기침체든 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일단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신용이 경제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3권에서 신용이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한다. “신용 체계는 생산력 증대와 세계 시장 확장을 가속시키면서도, 위기를 난폭하게 분출시키고 그럼으로써 구래의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급증한 배경에는 대중의 생계 악화가 있다. 7월 8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무원 집회

정치 상황 급변 가능

경제 위기가 급속히 악화되면 전반적인 정치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다. 1997~98년의 소위 IMF 위기와 2008~09년의 월스트리트발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알 것이다.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이 당선돼 1961년 이후 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당시에 한국 지배계급이 IMF를 불러들인 심각한 경제 공황으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일시 잃었기 때문이다.

물론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의 집권으로 지배자들은 상황 통제력을 되찾았다.

2008~09년 월스트리트발 경제 공황은 월스트리트와 이후 그리스와 스페인 등지에서 광장 점거 운동을 촉발했다. 그리고 광장 점거 운동은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 DSA와 시리자와 포

데모스 등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의 등장을 촉진했다.

이런 흐름에 타히르 광장 점거와 이집트 혁명이 포함됐던 일을 놓쳐선 안 된다. 즉, 2008~09년 경제 공황은 이집트와 아랍 나라들에서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치가 아니라 혁명을 촉발했던 것이다.

위기의 정치적 효과

아랍 혁명이든 유럽의 좌파적 개혁주의든 결국 다 실패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공황이 닥친다면 새로운 정치적 격변이 전개될 것이다.

그 격변은 어쩌면 파시즘이나 극우가 오른쪽 중심을 차지하는 그림이 될지도 모른다. 그림의 왼쪽 중심을 차지할 세력이 또다시 좌파적 개혁주의일지, 그보다 더 좌파적인 급진 좌파일지

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2019년경부터는 시리자와 포데모스, 제러미 코빈의 실패로 그림 전체로 보아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있어 왔고, 혁명적 또는 급진적 좌파가 그림의 왼쪽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2008~09년 경제 공황의 여파 속에서 전개된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4년 뒤 우파 정당을 정부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에 그 4년 뒤인 2016~17년 초에 박근혜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중도계 문재인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기층에서는 민주노총과 정의당, 진보당 등 좌파 세력이 득세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배신과 좌파의 포퓰리즘 전략 실패로 계급간 세력균형은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기울었고, 그 덕분에 윤석열이 집권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도 채 안 돼

급속히 우경화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2주 전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반국가 세력” 낙인을 찍는 극우적 발언을 했고, 뉴라이트 출신 극우 인사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했다. 이밖에도 많은 반동과 억압 강화를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꾀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국가 기구들 안에서의 세력 균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서 여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은 듯하다.

대중의 반감과 정치적 표현의 격차

윤석열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윤석열 퇴진 집회의 규모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광범한 대중에게는 대통령 퇴진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9개월 뒤면 총선인데 굳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 해 봤자 국회의 탄핵 소추다 현재의 탄핵 인용이다 하면 그 시간 다 가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은 생각할 것이다.

또는, ‘윤석열을 퇴진시켜 봤자 또 민주당 정부일 텐데 1년여 전에 경험한 바로는 그다지 끌리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국힘과 민주당 외에 다른 신통한 대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금태섭 신당이 만들 ‘제3지대’는 기회주의적으로 국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찾는 여백이 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류호정·장혜영·조성주 같은 정의당의 매우 온건한 청년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세할 것 같지만 말이다.

정의당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어수선하고 술렁이느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신당 설립식 재창당으로 왼쪽 날개를 약간 보강하겠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경화 하는 윤석열 정부 6월 28일 극우 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가한 윤석열

대중에게서 소원해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세계

공식 정치의 우경화가 세계적으로 일관적인 현상이다. 공식 정치라는 말은 공직자들의 정치를 말한다. 공식 정치 우경화는 서구에서는 인종차별과 난민 공격 강화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 미국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을 위헌으로 결정한 일이나,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10대 소년 하나가 경찰의 공격으로 피살당한 일은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일 뿐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된 데서 보듯이 파시스트들이 집권 가능한 정치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정치 전체라기보다는 그 우파인 여권이 우경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장

외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그 쟁점뿐 아니라 사사건건 여권과 민주당은 언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식 정치가 여권의 급격한 우경화 때문에 내부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소위 제3지대론이 일부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덜 온건한 개혁주의자들로부터는 큰 반향을 못 얻고 있다.

분노를 운동으로

그러나 공식 정치와 대중 정서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얼마 전 연금 개혁 추진 때 우리가 보았고, 지금 경찰 만행 규탄 빈민가 청년 소요에서 보듯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알렉스 캄리니코스의 표현을 빌리면 “난장판”이다. 한국의 윤석열도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설득하지 못했고, 사실 MZ노조라는 곳도 포섭하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의 일부로 내놓기까지 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도 노사 양쪽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 연대〉신문 독자들 중에는 2년 전 넷플릭스에서 스트림 된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건 대중의 정서가 기성 질서에 대한 반감으로 차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

임’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메타포이자 한국 사회에 대한 메타포임은 잘 알려져 있다. 제1화만 보더라도 막대한 가계 부채에 짓눌려 있거나 기타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주류 정당들에 불만이 많음은 지난 4월 재·보선 결과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0여년 전부터 노동조합 운동과 대출금리인하운동의 전북지역 기층 활동가여서 지역의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천창수 신임 울산교육감도 현대중전기 노동자 운동 출신이자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출신이고 교사 운동 출신이다.

공직자들의 일부(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는 대중이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기층 대중의 정서가 공식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자본주의 선거 참여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비해 부차적이다. 그러므로 혁명적 좌파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수위가 상승하고 좌파가 그 운동을 키울 때, 즉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서로 맞물리는 그때 일정한 선거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가령 불세비키 당이 국회의원 여섯 명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12년부터 제1차세계대전 개전 때인 1914년까지 일간 〈프라우다〉 신문이 날개 돌린 듯이 팔리면서 주요 도시들에 수많은 〈프라우다〉 지지자 모임들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매주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퇴진 집회



생계비 위기와 고통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노동자들. 7월 3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

노동운동 속에서 보는 급진적 전망

그런데 어떤 혁명적 좌파는 지금 현장 조합원 신문과 현장 조합원 운동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전에 필요한 전술을 건너뛰는 것이다. 먼저 기업이나 업종이나 산업의 공식적인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지시하도록 아래로부터 압박을 가하고, 그게 절반만 성공한 다든가 실패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일반 조합원들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구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그런 활동과 조직에 착수하려다가는 노조 집행부 선거 승리에 관심 있는 자들만 결집시키게 될 것이다. 현장 조합원 운동은 집행부 선거나 정책 회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단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업 참가자들의 역할이 그저 투표나 하고 사태 추이를 방관하는 것에 국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존 집행부가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를 회피할 때 그런 운동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조직은 아마도 파업 위원회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노조 집행부는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므로 그런 기구가 필요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남아공이나 브라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민주노총 같은 좌파적 노동조합의 위신이 대단해서 조합원들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투쟁 수위가 한껏 올라가고 민주노총 소속 조직(연맹이나 기업)의 좌파 지도자들이 그런 높은 수위를

감당하기 어려워할 때, 기존 집행부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기구(파업위원회 같은 기구)의 필요성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다.

그런 기구에 기존 집행부 성원의 일부가 포함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의 정서와 염려 사항에 둔감한 자들이 포함돼선 안 될 것이다.

투쟁의 전면화를 향해

파업 수위를 올리려면 파업을 하루짜리 이틀짜리로, 또 부분 파업, 순환 파업 따위로 제한하려는 노조 지도자들에 맞서 무기한 파업, 전면 파업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파업은 시기 집중으로 조율되고 있지도 못하다. 징검다리 파업 같은 느낌이다. 윤석열 퇴진 요구를 내걸고도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위한 뽀툼을 마련해 줄 생각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비조합원이나 비취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조차 언급생심인 듯하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각 연맹이 파업 일정을 하나로 맞출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또 각 연맹은 각 대기업이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실천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지도층 둘 다에게 부문주의와 경제주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부문주의/경제주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상이한 쟁의 집단들이 서로 연결돼

야한다. 특히, 연대 파업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노동자 연대이다. 적어도 파업 일정 조율을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층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핵심 목적이 바로 이런 주장과 활동에 제약을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지금 연대 파업을 벌인다거나 파업 시점 동시화를 이뤄 낼 여건은 못 된다. 하지만 피케팅에 동참할 수 있고, 지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파업 지지 모금을 조직할 수 있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생수병과 샌드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파업을 옹호하는 주장을 잘 펴서 광범하게 전파하는 것도 효과적인 연대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 활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현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는 첫째, 정부·여당의 법질서주의 우경화이다. 서구에선 이민과 난민 억압, 그리고 파시즘 등 극우의 부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권위주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권리 등 인권 그리고 자유주의 등에 관해 새로 살

펴봐야 하고, 사회주의적 전략에 관해서도 그렇다. 물론 계속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국주의와 미중 갈등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걸로 수천, 수만 명이 동원될 것 같지는 않다. 혹시 윤석열 정부가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몰라

도 말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집회는 지금까지처럼 가끔 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제국주의 열강과 관련된 주장과 (어쩌면) 행동이다.

셋째, 노동자 운동에 관여할 태세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인터뷰] 프랑스 급진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나헬의 죽음에 분노하는 소요 직전에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저항이 수개월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번 소요가 연금 개악 반대 투쟁과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저항이 직접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연금 개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를 만들려 했어요. 사실 연금을 둘러싼 싸움은 오래된 싸움입니다.

마크롱이 집권한 이래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정부가 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모든 세력을 공격하려고 해요. 노동조합이 그런 연결을 가능케 하는 조직의 하나인데요, 전통적으로 정부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대중의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벌어지는 동안 국가는 노동조합 운동을 강그리 개무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노동조합들이 유례 없는 규모로 행동에 나서 [은퇴 연령을 앞당겨] 자유로운 시간을 늘리고 사람들의 건강도 지키는, 노동과 관계 맺는 다른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 줬는데도 말이지요. 정부는 대화조차 거부했어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그들을 앉히는 등 운동이 벌어지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는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인종차별 반대 운동도 이런 공격의 최전선에 있어요. 마크롱은 이전 임기 [2017~2022년] 때 인종차별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을 강제 해산시켰어요. [관련 기사: '프랑스, '이슬람 급진주의'와의 투쟁? —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2020.10.7)]

마크롱 정부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인권 운동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시위를 금지하고, 심지어 단체 해산 위협까지 합니다. [NGO들의 연맹인] 프랑스 인권연맹조차 정부가 너무 나갔다면 몇 번이나 반발했어요.

이제 정부는 기존의 관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회 운동 전체를 업신여긴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의 급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연금 개악 맞선 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 운동이 부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사회 운동 세력들은 분



시위대를 총기로 겨누는 진압 경찰

“소요는 경찰 탄압에 대한 청년들의 정치적 응답입니다”

본지는 프랑스의 혁명적 좌파 활동가 셀마 오마리(우측 사진)를 인터뷰했다. 그는 알제리게 프랑스인이자 노동총동맹(CGT) 소속 활동가다.

열이 심해지고 있고, 공동 행동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종차별 문제에서 프랑스 좌파는 여전히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좌파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미지와는 달리, 인종차별 반대 단체들과 관계 맺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방리와[대도시 교외의 낙후된 이주 배경 노동계급 밀집 지역] 기반 단체들이 오랫동안 좌파들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을 봐도 그래요. 좌파들이 인종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봐요.

최근 소요와 분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프랑스 사회에서 북아프리카계와

흑인이 겪는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최근의 소요는 전통적인 노동조합 운동과는 다른 궤적에 있다고 봐요. 프랑스에서 소요는 자체적인 역사와 정치문화가 있어요. 프랑스 청년들은 지금의 소요를 2005년 소요와 비교합니다.

2005년에도 여러 방리외에서 3주 동안이나 소요가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 소요는 당시 14, 15세쯤 이던 두 소년이 [경찰의 괴롭힘을 피해 달아나다]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벌어졌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거대한 소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 기사:



‘차별이 낳은 분노의 폭발’(2005.11.9)]

소요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인 같은 일들을 멈추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응답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표적이다. 경찰이 당할 차례다. 이 개떡 같은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고요? 병원도 개떡 같죠, 자신들이 사는 거리도 개떡 같고, 동네도 개떡 같기 때문이죠. 모든 게 다 개떡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불태워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2005년 이래로 이런 물음에 대한 국가의 답변은 경찰 폭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정부가 투자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공공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정부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동등한 취업 기회와 교육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청년들은 경찰들에게 괴롭힘당하는 것은 물론, 학교로부터도 배제당해요. 이번에 살해당한 소년[나헬]도 어린 나이에 학교를 떠나야 했어요. 다행히도 자선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미래를 그럴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살해당한 겁니다.

한편, 경찰의 급진화라는 측면도 있어요. 경찰 내부 문화는 매우 우익적이에요. 파시스트들도 많아요. 그런데 경찰의 이런 문화는 프랑스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 사회가 된 것과는 정반대예요.

여기에 더해 사법부도 경찰을 옹호합니다. 경찰은 살인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업무로 복귀해요. 누군가 경찰에 의해 살해돼도 그 사건은 진전이 없어요. 아마 거의 2~3주마다 살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국가가 왜 이렇게까지 경찰을 동원한 억압을 강화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건가요?

세계적 흐름의 일부인 것 같아요. 사회 통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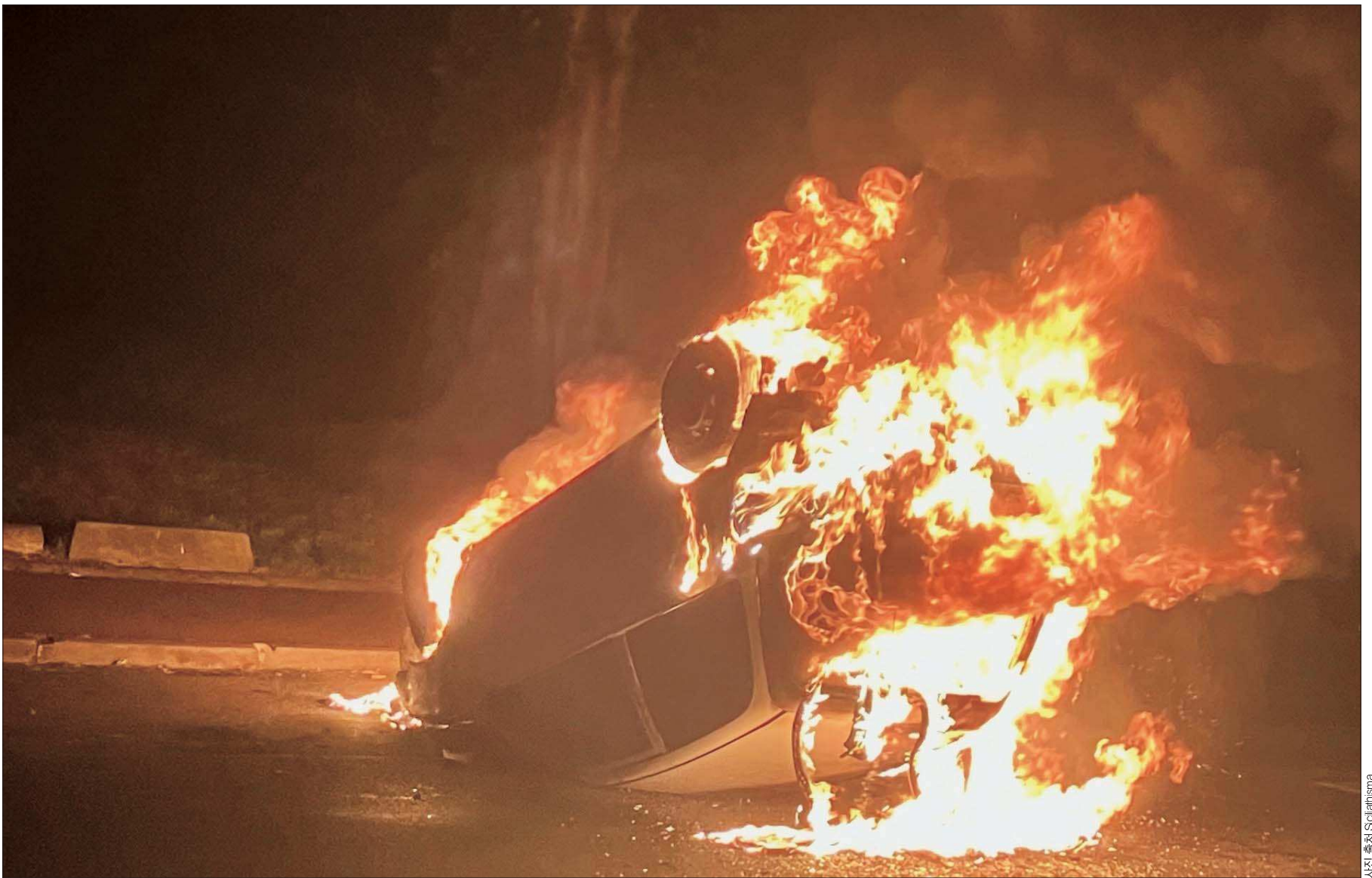


사진 출처: Sclatisma

청년들의 방화와 약탈은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다

사례가 많은데, 어린 아이들을 체포하려고 대테러 전술을 펴는 것도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죠. 제가 보기에 국가는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종차별이 너무나 주류화된 나머지, 국가는 이것을 문제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국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운동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는 동시에, 운동 자체도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급진화하고 있어요. 기후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토지 점거 운동의 전통이 있어요. 올해에도 대규모 토지 점거가 있었어요. [환경단체들이 집약적 목축 농장용 거대 저수지 개발 계획에 반대해서 벌였다.] 이 운동도 국가의 끔찍한 탄압을 받았죠. 노란 조끼 운동이나 연금 운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억압과 경멸이었습니다.

오로지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프랑스를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해요. 그런데 사회가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으니 강제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사회적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편에서는 연금 개악이 벌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요가 벌어지는 양상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는 “폴레랑스”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국가 자신도 “자유, 평등, 연대”를 가치로 내세우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이런 가치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의 가치들이었어요.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써야 한다는 것은 프랑스 역사에 아로새겨져 있어요.

프랑스 공화국 세워지면서 7월 14일은 국경일이 됐어요. 이날은 파리 시민들이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에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당시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왕정과 억압의 상징인 감옥을 겨냥해 소요를 벌이고 파괴해 버린 아주 폭력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많이 보관돼 있던 이 감옥에서 무기를 탈취해 체제를 뒤엎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평등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또, 프랑스 혁명 당시의 주요 구호 중 하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폴레랑스”나 “자유” 등이 언급된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사실 이 청년들은 “난 프랑스 사람이 아니야, 프랑스 사회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프랑스인이고, 이곳에 살고 있고, 나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고자 소요를 벌이는 겁니다.

니다. 화가 많이 나 있고, 꼭지가 돌아 있으니 다 불태워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 헬이 프랑스인이었는데도 그런 차별에 시달렸다면 이주민들의 처지는 더 끔찍할 것 같습니다. 공식 정치의 우경화와 인종차별 강화가 프랑스의 이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요가 벌어졌을 때 내무장관 다르마냉은 소요에 참여한 미등록 이주민들은 감옥에 갈 것이고, 추방될 것이라고 위협했어요. 프랑스에는 이주민들이 권리를 인정받고 체류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통로를 점점 좁히고 있어요.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동안에 정부는 이민자를 배척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죠. [당초 마크롱은 연금 개악 직후에 관철시키려 했으나 일단 물러섰다.]

프랑스는 지중해 연안국 중에서도 난민 수용에 엄격한 축에 듭니다. 지중해와 접한 긴 해안선이 있지만 난민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마크롱 정부는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 국가들이 난민들을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막게 하려는 것이죠.

이건 식민주의의 유산입니다.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아프리카 나라들의 자원을 수탈하는 주요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프랑스 제국주의의 역할을 빼놓고 이주 문제를 논할 수 없어요. [관련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 안팎에서 전쟁 피하는 마크롱(2021.1.27)]

제가 아프리카를 거듭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주민”은 유럽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주민은 곧 아프리카인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문제이고, 무슬림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주민들은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더 고통받아요.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경찰에게 괴롭힘 당할 가능성이 더 크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어요. 이들은 저항할 권리도 없어요. 저항에 나서면 출신 국가로 ‘추정되는’ 나라로 추방되죠. 출신 국가가 정확히 어딘지 알리고 하지도 않으면서 추방부터 시킨다는 말이지요.

미등록 이주민 일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해요. 파업을 해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체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데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파업 등 싸울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해요.

인터뷰 · 정리 박이랑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좌파는 어째서 청년 반란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는가

소요 사태를 계기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많은 좌파가 자본주의 국가를 비호하는 정치에 완전히 포섭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7월 8일 프랑스에서 노동조합, 좌파 정당, 운동 단체 100여 곳이 30여 개 도시에서 “애도와 분노”의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이 행진은 소요가 대부분 진압된 후에 추진됐고, 제한적인 경찰 개혁만을 요구했고, 경찰과 소요 참가자들의 폭력에 거의 양비론을 취했다.

아래 기사에서 찰리 킴버는 경찰 등 국가의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려면 소요와 그 참가자들을 방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가장 저명한 좌파 인사 장뤼크 멜랑송은 경찰이 “멋대로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연금 개악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때려잡던 경찰이 이제는 십대 소년까지 살해하고 이를 덮으려 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당(PS)의 대표 올리비에 포르는 그 정도의 표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나섰다. 포르는 멜랑송의 발언에 “심각한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리옹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자제하고 시민적 평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호소는 옳다. 폭력을 부추기고 용인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사회당은 녹색당·공산당과 함께, 멜랑송이 이끄는 선거 연합 신생태사회민주당(NUPES, 이하 “뤼프”)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당의 일부는 뉘프와의 연계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지율이 폭락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뉘프 덕인데도 말이

이번 소요는 프랑스 사회의 깊은 계급 분열과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다

다. 이제 사회당은 소요에 대한 반응을 뉘프와 결별할 또 다른 구실로 삼으려 한다.

멜랑송은 자기 말이 너무 심했나 걱정하는 기색이다. 멜랑송은 파리 인근의 소도시 라이레로즈에서 우파인 시장의 집이 공격당하자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멜랑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훈련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에 불과하다.

전쟁 중

자신들이 “기생충”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여기는 경찰을 설득해,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노동계급 지킴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멜랑송의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에 소속된 클레망틴 오템은 훨씬 당돌하게 말한다.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다. 일상이 비정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요 사태의 책임은 상황이 꼬아 터지도록 방치한 권력층에게 있다.

“2005년에 자이드와 보우나가 경찰에 살해된 것을 계기로 소요가 일어난 뒤에도 그들은 뭘 했는가? 불평등이 심해지고, 빈곤이 창궐하고, 복지가 열악해졌다.” 오템은 낭테르에서 “정의를 위한 행진”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과 밀접한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계급독립성’(A2C)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흑인과 아랍계가 대다수인 그 노동계급 청년들의 용기와 단호함을 옹호해야 한다. 녀 달 동안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경찰과 국가,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이 폭발했다. 자본주의와 지배계급, 국가의 강제력과 구조에 맞선 전(全)계급적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계급독립성’은 7월 14일 마크롱이 참가하는 혁명기념일(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기리는 날) 공식 행사에 맞서는 성격의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트위터에는 몇몇 옳은 말들이 올라왔다. “반란과 분노는 정당하다! 폭력적인 정권과 체제를 끝장내고 싶어 하는 반란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 7월 1일자 게시물이다.

다음 날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계속되는 항쟁을 지지하며 NPA는 오늘 저녁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에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 #나헬에게정의를.”

지난해 NPA 측 대선 후보였던 필리프 푸투는 이렇게 말했다. “존엄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경우를 모르는 짓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7월 4일 오전이 되도록, 즉 소요가 시작된 지 1주일이 거의 다 되도록 NPA 웹사이트에는 소요에 관해 한마디도 올라오지 않았다. 어쩌면 NPA 온라인 활동이 원래 굵든 것일 수도 있다.[7월 4일 오후 5시 56분에 게시물에 올라왔다. —역자] 그러나 기민한 대응은 분명 아니고, 사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공공 서비스 수호?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 파비앵 루셀은 소요 참가자들에게 역겨운 비난을 잇달아 퍼부었다. 6월 30일 루셀은 “그날 밤 일어난 폭력을 전적으로 규탄”했다. 경찰 폭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루셀은 “좌파라면 공공 서비스 약탈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수호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셀은 거둬 인종차별적 주장으로 후퇴한 바 있다. 루셀은 프랑스 국경을 구멍이 숭숭 뚫린 “체”에 비유하며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온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혁명적 좌파를 자처하는 또 다른 단체 ‘노동자투쟁(LO)’은 메스꺼운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자투쟁은 성명서에서 흑인·아랍계 청년들이 겪는 빈곤

▶ 13면으로 이어짐

소요는 정치적인 것이다.

약탈도 마찬가지다.

반란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탄압을 위해 거느린

강패들이다.



“소요는 업신여겨진 자들의 언어다” 1965년 미국에서 일어난 와츠 항쟁

▶ 12면에서 이어짐

과 인종차별을 인정한다. 그러나 뒤이어 이렇게 주장한다.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사는 젊은이들, 아이들이 있다. 그런 분노 때문에 소수가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 분노가 나헬의 죽음을 계기로 맹목적 폭력으로 분출한 것이다.

“몇몇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 파괴적인 분노는 환멸, 실망, 심지어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럴 만하다! 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차가 불타고 자기가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과 테니스장, 골프장이 불탔을 부르주아지가 아니다.

“사회 복지 기관이 사라져 궁핍으로 고통받고, 장 볼 가게가 사라지고, 교통편이 없어 출근도 못 하는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해를 입었다.”

그 성명은 “자신들이 주민들의 삶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 소수의 폭력배와 인신매매범들”을 비난한다.

이런 역겨운 분석은 정부 대변인 올리비에 베랑의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베랑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없다. 풋락커·라코스테·세포라 점포를 약탈하는 데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는 없다. 그것은 그저 약탈일 뿐이다.”

소요는 정치적인 것이다. 약탈도 마찬가지다. 반란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

는 것은 압도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탄압을 위해 거느린 폭력배들[경찰을 가리킴 — 역자]이다. 사회적 분노가 부유층과 그들의 사치스런 은신처만 표적 삼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다. 심지어 파업도 그렇다.

간호사들이 파업을 벌이면 백만장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실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 줄 개인 주치의가 있을 것이다. 간호사 파업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고통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늘리고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지키기 위한 간호사들의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교사 파업도 마찬가지다. 계급투쟁이 계급의 직접적 적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계급투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와츠 항쟁

196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와츠 소요는 오늘날 위대한 항쟁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항쟁에도 비난이 쏟아졌었다.

와츠 소요는 경찰의 잔혹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로 1965년 8월 11일 분출했다.

일주일도 안 돼 소요는 120제곱킬로미터 일대로 번졌다. 34명이 목숨을 잃

었는데 그중 백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밖에도 1032명이 다쳤다. 경찰은 3438명을 체포했다. 4000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억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요 참가자들은 건물 600채를 파손·파괴했다. 그러나 그 소요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와츠 소요는 기성 권력 기구에 해법을 기대하고 변화를 구걸하지만은 않겠다는 수많은 흑인들의 선언이었다.

흑인 노동자들은 와츠를 방문한 평등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에 게 야유를 퍼부었다. 킹 목사가 약탈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 항쟁으로 킹 목사도 변했다. 3년 후 소요가 다시 분출하자 킹 목사는 한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폭동은 업신여김 받은 자들의 언어다.” 킹 목사는 흑인 “중간계급과 그 계급이 배출한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킹 목사는 암살당했다.

킹 목사의 죽음으로 또다시 거대한 소요가 일어났다. 하지만 충분히 큰 혁명적 세력이 없었기에 거기서 가장 큰 득을 본 것은 흑인 중간계급 상층이었다. 그들은 그 기회를 통해 정치권과 재계에서 한자리를 차지했다.

역사의 이러한 기본적 교훈을 프랑스 좌파들은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지 않는 문제점을 오랫동안 보여 왔다.

인종차별 반대

2008년 노동자투쟁과 NPA의 전신 [혁명적공산주의동맹 LCR을 말함 — 역자] 소속 회원이었던 교사들은 무슬림 학생 두 명이 니갑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게 만들었다.

많은 NPA 당원들이 히잡을 착용한 자기 당 후보를 매우 적대시해, 그 후보와 지지자들이 탈당한 일도 있었다.

프랑스 극좌파는 프랑스 국가의 악독한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에 맞서지 않았다. 그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공격했던 세속주의가 오늘날에도 진보적이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늘날 세속주의는 무슬림 억압을 옹호하는 구실을 하며,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수단이다. 프랑스 좌파는 프랑스 식민주의가 노동계급 운동 내에 남긴 해로운 유산에 도전하지 않았다.

소요와 파업은 다르다. 파업은 이윤의 원천을 타격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의존하는, 일터에서의 착취를 중단시킨다. 파업은 민주적인 집단적 규율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자 저항이라면(이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온전히 통제하는 신중하게 계획된 보여 주기식 행동이 아니다) 소요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소요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세상을 뒤집어엎기에 소요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요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힘이 없다. 하지만 소요가 아닌 혁명을 추구한다고 해서, 기성 질서의 인정을 더 추구하거나 체제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체제를 끝장내려면 일터의 힘과 거리의 힘이 결합돼 봉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첫 단계는 지금 소요 참가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출처 Charlie Kimber, 'Stand with the rioters against the French state and police' (2023. 7. 6) / 번역 김준호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임준형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했다.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다. 열악한 노동조건의 영세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악안은 거기에 더해, 사업장 변경 시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의 이주노동자는 아예 그 세부 업종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게다가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올해 9월부터 신



이중 삼중의 제약 7월 11일 고용허가제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까지 적용했다가 더 큰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한 듯하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특정 업종들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며 이런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이려는 업종은 노동강도가 너무 세고 임금이 낮고 환경이 열악한 곳들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삶의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도 이를 감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이직하거나 주거 지역을 옮기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애초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목적에 어긋난다. 이번 고용허가제 개악은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41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민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단속을 강화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31.5퍼센트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한다고 불평한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들이 그 제약을 뚫으려고 갖은 애를 쓰며 나름의 저항을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부가 “태업”을 문제 삼는 것이 시사하는 바다.

이주노동자들은 2003년 명동성당 농성 등으로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한국인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인상적인 투쟁을 벌인 바 있다.

2003년 명동성당

이번 개악에는 통제를 강화해 이주노동자들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저항에 나서기 더 어렵게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주노동자 통제 강화와 유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숙련된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이주노동자 고용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업종과 지역에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두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인책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장기 체류할 전망이 생기며,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여기는 이주노동자들이 늘면, 열악한 조건을 계속 감내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도 늘어날 것이다.

하층 노동자들의 조건이 개선돼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 압력도 줄어든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돌연사·자살까지 낳는 고용허가제

올해 6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3명이 잇따라 돌연사하고, 1명이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중 한 명인 바하두르 씨는 익산의 한 석재 업체에서 일했다. 그는 무거운 석재 작업으로 인한 위장염·결장염 등을 호소하며 3월 고용센터에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을 냈으나 거부됐다.

동료들은 사측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다”며(정부가 문제 삼는 “태업”에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바하두르 씨가 “건강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사측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그는 6월 28일 아침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한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고된 노동으로 평소 주변에 힘들다고 얘기하거

나, 사용자가 ‘일을 못 한다, 네팔로 돌려보내겠다’며 압박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한국 전체 노동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고용허가제 개악으로 사업장 이동이 더 제한되면 이런 비극이 더 많아질 것이다. 또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딜 수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어 차라리 미등록 신분이 되기를 선택하는 이주노동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철회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허가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한국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집배원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검배”)을 폐지하라

“검배가 죽어야 집배원이 삽니다.”

집배원의 검배 제도는 병가·연가 등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검배’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검배로 집배원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2021년 집배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검배를 하는 날 업무 시간이 평균 1시간 47분 늘었다고 답했다(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게 된다). 이는 피로도와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설문조사에서는 집배원의 55퍼센트가 검배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안타깝게도 2017년 5월 경북에서 검배 중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4월 강원에서는 검배로 인한 격무를 호소하다 급성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아파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자신이 빠지면 동료들이 검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2021년 집배원의 평균 연가 사용률은 30.7퍼센트에 불과했다.

2022년에 집배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1인 평균 9.6일이었는데, 이렇게 쌓인 연가를 합치면 퇴직 전 80~90일(약 4~5달)이나 된다. 그래서 퇴직 전에 쌓인 연가를 몰아서 사용하게 되고, 퇴직 예정자의 업무를 동료 집



감감무소식 사측은 검배 대책 마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검배 폐지·대체인력 쟁취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간부 결의대회

배원들끼리 다시 검배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즉각 인력을 충원해서 검배를 폐지해야 한다. 집배원들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려면 약 720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민주우체국본부는 추산한다.

검배 문제의 심각성은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도 인정하는 바다. 지난해 8월 사측은 2022년 하반기까지 검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사측은 인력 증원은커녕 집배

원들에게 택배 배달을 시키며 더욱 쥐어짜려 한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집배원들의 특성상, 부피와 중량이 나가는 택배 배달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데 말이다.

사측이 집배원에게 택배 배달을 맡기려는 목적은 비용 절감이다. 우체국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위탁택배원들은 배달 건당 수수료(임금)를 받는다. 위탁택배원의 물량을 줄여 수수료를 절감하고, 대신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강화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사측이 밥 먹듯 약속을 어기자, 민주우체국본부는 현장 투쟁과 함께 검배 철폐를 명문화하는 입법 운동에도 나섰다.

고광완 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7월 15일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국회 압박 투쟁과 부족한 인원에 대한 예산 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집배원들의 검배 폐지 투쟁을 지지한다.

신정환

▶ 16면에서 이어짐

중해 집회에 참가하며 연신 힘 있게 구호를 외쳤다. 전국에서 많이 모였다는 자신감도 느껴졌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파업”이라는 정부의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우리의 파업은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파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니 파업을 접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의료 현장은 지금 인력 대란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들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66퍼센트

가 이직을 고려하고, 신규 간호사의 52.8퍼센트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입니다. 극심한 인력 부족, 심각한 구인난! 이것이 진짜 진료 차질이고 의료 공백 아닙니까?”

이어 발언한 지부장들은 현장의 불만을 생생하게 대변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저는 25년 차 간호사입니다. 병원 일이 너무 많아서 10년 차가 됐어도 퇴근 시간을 2시간 이상 넘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데 왜 병원 인력은 이렇게 ‘악’ 소리가 나오게 하는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비용이 아닙니다. 적정 인력 기준이 마련돼

야 합니다. 9·2 노정 합의는 지금 당장 이행돼야 합니다.”(공지현 한양대의료원지부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칭송하던 ‘영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으로] 현재 우리는 재정난에 허덕이며 임금 체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사구팽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대에 투자해야 합니다.”(동현 남원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파업 노동자들은 이어서 열린 민주노총 파업 집회에 참가한

후 도심 행진을 했다.

파업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과 세종시, 부산, 광주 등 4개 거점에서 집회가 열렸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자 긴축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노조의 협상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며 업무복귀명령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래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더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신정환



보건의료노조 파업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6만 5000명 중 필수 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4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거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협상이고 그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사용자 측"이라고 발뺌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부는 2년 가까이 노조에 약속한 인력·공공의료 확충 이행을 외면해 왔다. 2021년 9월 2일 합의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맺은 것이었다. 합의 당사자인 정부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용자인 공공병원들은 정부 명령과 지침에 따라 일반 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코로나 환자 치료에만 전념했다. 코로나 방역이 해제됐지만 의료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파업 투쟁이 더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진과 일반 환자 이탈로 병상가동률은 4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병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공

공병원원은 무려 8.5퍼센트, 11개 주요 사립대병원은 4.4퍼센트나 삭감됐다. 노동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임금 인상도 절실히 바란다.

정부는 말로만 '영웅'이라고 하고 코로나 기간 3년 4개월 동안 희생한 노동자들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노동자

들은 "정부에 씻을 수 없는 배신감마저 든다"고 했다. 정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병원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노정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완전 정당하다.

정부의 비난과 달리,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인력 부족 속에서도 헌신해 온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을 공감하는 심정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보건의료·노동·시민·정치 단체들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반윤석열 정서가 광범한 것도, 병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정부 파업에 나선 요인이었을 것이다.

지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첫날인 7월 13일 낮 수도권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업 노동자 약 2만 명(대다수는 20~30대 여성 노동자들)이 상경해 1일 차 파업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 동화문세점부터 대한문 앞까지 4개 차로가 가득찼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들은 자리를 거의 이동하지 않고 집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정의당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

7월 19일(수) 오후 8시 | 발제 김인식 (노동자연대) 발행인

참가신청 bit.ly/0719-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